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2018. 1. 29.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방송통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

Ⅱ 2018년 비전과 목표

Ⅲ 핵심 추진 과제

1.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2.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3.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4.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 혁신

I. 방송통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



2017년 방송계 화두는 '공정성·독립성'...파업 등 몸살

송고시간 | 2017/12/14 07:00



KBS-MBC 장기파업 거지며 노사 극한 갈등...정치권도 논쟁
'방송 정상화' vs '언론장악' 논란 속 제도 개선 '오리무중'

(서울=연합뉴스) 한영복 오수진 기자 = "어떤 세력이나 정권에도 흔들림 없는, 제구실하는 방송을 만들겠다. 비정상적인 방송을 정상화해 방송사가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적, 우호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한겨레

10건중 4건이 '유해 보도'...유권자엔 안통했다

등록 : 2017-05-18 18:24 수정 : 2017-

■ 자체 검증 부실한 '따옴표 저널리즘' 관행 여전 언론학계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따옴표(인용) 저널리즘', '경마 저널리즘' 등 기존 선거 보도 관행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따옴표 저널리즘이란 정당 등이 제기하는 의혹을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겨 '받아쓰기'한 보도를 말한다. 이런 보도 관행은 의혹을 제기한 쪽의 의도에 맞게 의혹만 부풀려 시민들의 공격 속의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화방송은 당사자 반론조차 배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4월3일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는 "마 고마해!" 문 아들 특혜 의혹 공방, '문 아들, 의혹 내용은?'이란 곡지를 연달아 내보냈다. 첫 번째 보도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의혹 제기들 각 정당 인터뷰 3개로 배치했고, 문 당시 후보의 해명을 한 문장으로 덧붙였다. 이어진 보도는 의혹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나열했는데, 각 의혹의 사실 여부 확인이나 문 후보 쪽, 정부기관의 해명은 배제했다.

한국방송 노조도 4월5일 낸 감시단 보고서에서, <뉴스9>의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의혹 보도가 정당의 폭로를 받아쓰기한 수준인 것이, 반론에 할애한 시간이 의혹 제기보다 현저히 적었다



국민 76% "가짜뉴스 탓에 진짜뉴스도 못 믿겠다"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3명은 가짜 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조차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사회분열이 심해지고 있다고 봤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일반 국민의 가짜 뉴스에 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6%는 가짜 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를 볼 때도 가짜로 의심한다고 답했다.



"몰카 등 불법 촬영물 재유포도 성범죄로 처벌해야"

송고시간 | 2017/11/28 06:30



서울YWCA 주최 '시민, 젠더독력을 말하다' 토론회



중앙일보

외주사에 이어 독립 PD들까지 나서 "방송사 불공정 바로 잡아야"

[중앙일보] 입력 2017.08.17 14:24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3만명 고객정보 털렸다

빗썸측 "예치금 안전" 불구,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속출...가상화폐 비번까지 유출
"수억 인출 피해" 소송 움직임

이지홍,오찬홍 기자 | 입력 : 2017.07.03 17:33:38 수정 : 2017.07.03 19:52:16

■ 직원 개인PC 해킹...휴대폰-이메일 정보 빼내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이 사이버 공격으로 3만명 넘는 고객의 정보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가 빠져나간 개인정보로 인해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빗썸 측은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보관 중인 비트코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힐스에 따르면 빗썸은 하루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2위 규모 비트코인 거래소다.

비트코인 누적 거래액은 2조원에 달하며 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 거래액은 530억원을 돌파했다. 빗썸은 해킹으로 인해 회원의 3% 수준인 3만1000여 이용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빗썸 홈페이지는 "해킹은 보안을 강화하고 있던 직원 PC가 해킹을 당한 것"이라며 "거래정보가 담긴 직원 사서함은 비밀번호로 잠겼다. 이따금 직원 개인 이메일(개인용)에 업무정보를 유출하고, 전화와 가상화폐 계좌금

I. 방송통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



주요 민원

과도한 비속어, 외래어 방송 자제



인터넷방송 과다결제에 의한 피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과도한 인터넷서비스 해지방어로 인한 불편



현장 의견 수렴

- 방송통신 관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도 관심 가져 주기를...(시민단체)
- 방송사와 외주사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해소되고 자유로운 제작 환경이 형성되었으면...(독립PD)
- 통신시장에 공정한 경쟁 체제와 **상생의 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알뜰폰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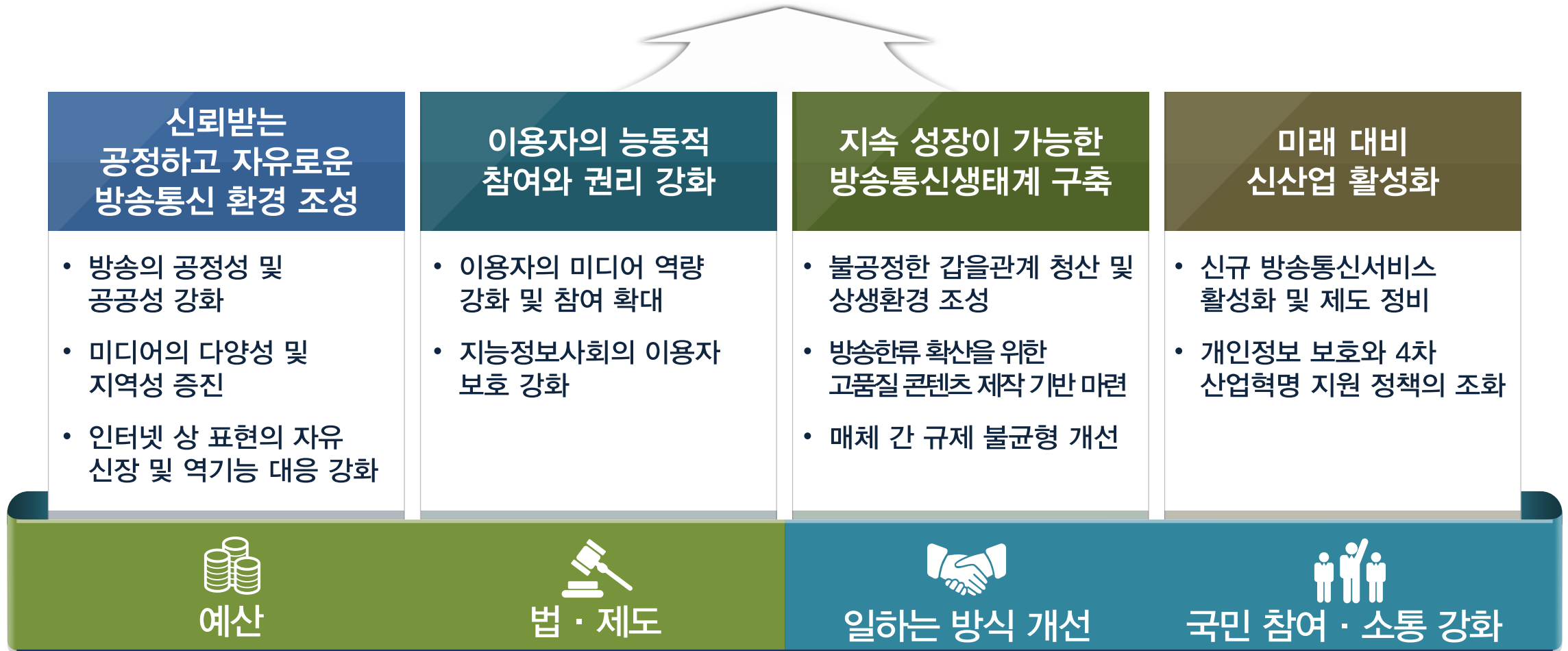


전문가 건의

- 빅데이터 기술 발전 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부터 ...(산업기술전문가)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인터넷사업자)
- 미디어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잘 나타나 **국민 간 소통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학계)

II.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비전과 목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III. 핵심 추진 과제

1.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2.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3. 개인 · 위치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4.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 혁신



핵심 추진 과제 1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미디어에 대한 불신은 올바른 여론형성과 사회 통합을 저해

-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

* 국민이 바라는 개혁 : 3위 - 언론 개혁 ('17.5월)

- 오보 · 막말 · 가짜뉴스로 사회적 비용 증대
- 인터넷 상 음란 · 폭력물, 사이버 성폭력 등으로 국민 불안 가중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미디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

방송의 공정성 · 공공성 강화

인터넷 상 불법 · 유해정보의
철저한 차단



오보 · 막말 · 가짜뉴스 없는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참여 확대로
국민의 미디어 역량 제고

방송의 공정성 ·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신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 → 공영방송 이사회 · 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 마련

공영방송 자원 투명성 강화

- 수신료 면제 · 감액 · 가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선 추진

방송제작 · 편성의 자유 보장

-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
 - * 편성규약 공표방식 · 절차, 운영방식 등 규정
- 편성권 보장 기구 운영 시 방송평가 가점 부여

지상파 · 종편 · 보도PP 감독 · 평가 강화

- 재허가 ·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 철저
 - * '17년 부가조건 : 부당 · 해직징계 방지, 콘텐츠 투자 등
- 방송평가 제도 개선 추진

신속 · 정확한 재난방송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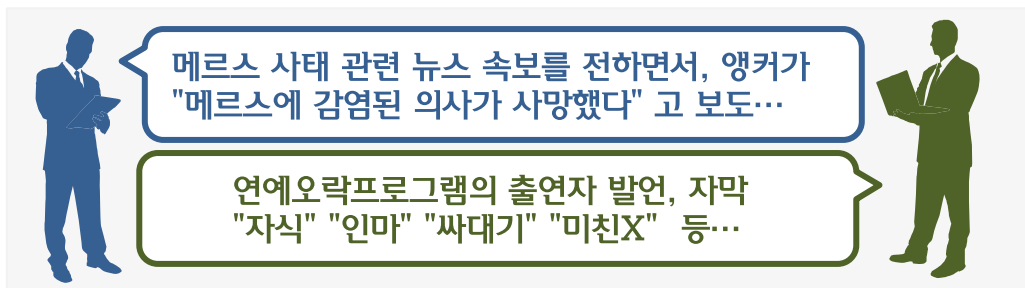
-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 재난유형 · 경보음 등 종합매뉴얼 개정



오보 · 막말 · 가짜뉴스 없는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송 오보 · 막말 대응 강화

- 방송프로그램 오보 · 막말 모니터링 강화



- 오보 · 막말 · 편파방송 관련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

* '17년 종편PP 재승인 시 오보 · 막말 · 편파방송 심의제재 감소 조건 부가

-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 20여개 주요 PP채널을 통한 캠페인 (연 2회 → 3회)
- 제작자 대상 방송언어 교육 (중앙지상파 1회, 지역지상파 5회)

가짜뉴스 확산 방지

- 자율규제 기반 조성

- 언론계 · 학계 · 연구기관 등 독립적인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 지원



- 가짜뉴스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이용자의 가짜뉴스 신고 활성화 및 팩트체크 결과 공유

- 정책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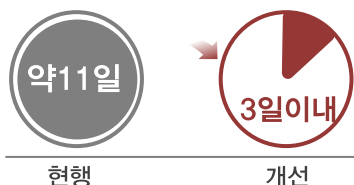
- 논란(disputed) 표시 부착 등 기술적 조치
-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 제한 검토
- 사업자, 유관기관(문체부, 경찰청 등)과 협력 추진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음란·유해정보 유통 차단

자율규제 강화

- 해외사업자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확대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긴급심의로 신속 차단



법제도 강화

-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음란물 유통사실 인지 시 삭제·접속차단 의무화

기술적 조치

- DNA필터링 차단기술 적용으로 불법영상물의 편집·변형 재유통 방지
- 방심위-경찰청 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 구축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폭력성 대응

-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를 통한 자율규제
 - 선정성·폭력성 등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 마련
 - 클린 인터넷방송 우수 진행자 발굴 및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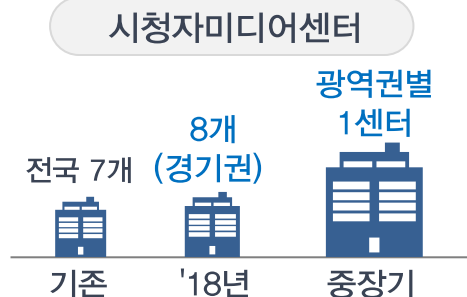


- 인터넷방송 결제한도액 하향 조정 및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
 - 결제한도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자율규제 추진
 -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법정대리인 고지 절차 마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참여 확대로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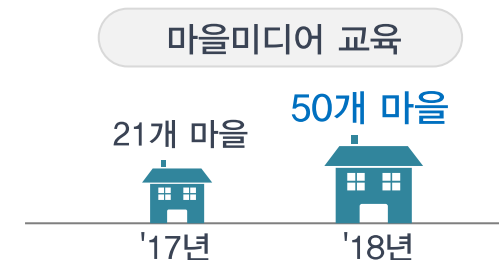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운영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 마을미디어 교육
- 시청자미디어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시범운영



인터넷윤리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

- 2022년 까지 100만명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 가짜뉴스 관련 올바른 인터넷 이용교육 실시
- 사이버안심존을 통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미디어 참여 기회 확대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KBS → MBC, SBS, EBS),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추진
- 시청자위원회 운영 내실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의무 확대 추진



핵심 추진 과제 2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불공정 경쟁 환경은 방송통신생태계 지속 성장의 걸림돌

- 방송통신시장의 성장 정체 (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2%)
- 방송 · 통신 경계 붕괴로 시장 상호진출 본격화
- 서비스의 글로벌화로 해외사업자 국내 진출 증대

사업자 간
경쟁 격화

- 부당한 갑을 관계 형성
- 약탈적 경쟁행위 심화

제도 개선 · 점검 강화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 분야 부당한
갑을관계 해소

통신 · 인터넷 분야
불공정행위 개선

국내 · 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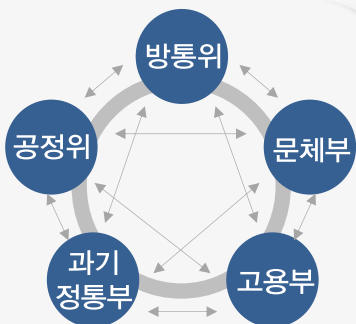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방송 분야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 배분 '가이드라인' 제정
- 방송사-외주사 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 금지행위 법제화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 5개 부처 합동 근로환경 실태점검



5개 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 공동대응

TV홈쇼핑사-납품업체 간 갑을관계 개선

- 영상제작비 납품업체 전가 금지
- 내부 계약업무 처리절차 개선
 - 제작비 부담 주체 · 부담 비율 등 계약서 명시, 증빙서류 보존 등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관행 개선

- 유료방송사의 중소PP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미지급, 채널 제공거부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및 차단

프로그램사용료 미지급

채널제공 거부



통신 · 인터넷 분야

통신분야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포털



중소CP

→ 불합리한 수익 배분, 광고 강요, 부당차별 행위 등



이통사



알뜰폰

→ 도매대가 산정 시 부당한 조건 부과 행위 등



이통사



유선방송사

→ 동등결합 상품 구성 시 이통사의 과도한 거래대가 요구 등

인터넷분야 상생 · 발전 협의체 운영

-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 · 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등 이슈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국내외 인터넷기업, 소비자단체, 학계 · 법률 전문가 참여

주요 현안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보호

- ① 망중립성 · 제로레이팅
- ② 사후규제체계 합리화
- ③ 중소CP · 제작자 지원

국내 · 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방안

- ①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확보
- ② 망이용료 대가 합리화
- ③ 부가통신사업자 규제개선

국내 · 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제공 시 문제점



국내 · 외사업자간 차별 없는 규제 환경 조성

- 해외사이트 불법정보 유통 차단
 - 개인정보 유 · 노출, 음란물 유통 등 지속 삭제 · 차단
 - 경찰청과 협력하여 국제공조수사
 - 中 · 美 등 현지 인터넷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해외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집행 강화
 - 해외CP-국내ISP 간 망사용료 분쟁,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CP 부당차별 등 조사 · 제재 강화
- 실제 사업자 vs 신고 사업자 불일치 개선
 - 위치정보사업 시 해외기업 본사가 직접 허가 · 신고
 -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검토





핵심 추진 과제 3

개인 · 위치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개인정보 보호” vs “안전한 활용” 간 조화 필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지속 발생



- 가상통화를 노리는 해킹 및 개인정보 탈취 증가
- 모바일앱을 통해 연락처, 위치정보 등 이용자 정보 무단수집 피해 발생

개인정보 활용 신산업의 가파른 성장

세계 빅데이터 시장 전망



- 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개인정보 활용이 새로운 산업 발전의 핵심요소

➡ 철저한 보호 하에 규제 개선 등으로 신산업 활성화 지원

국민의 개인·위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법·제도 개선

- 침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규제 집행력 강화

-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과징금 상향
-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 도입
-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도입

피해구제 실질화

- 집단소송제도
- 손해배상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취약분야 실태 점검

- 가상통화사이트, O2O사업자, 바이오 정보 등 신유형 서비스 실태점검 강화
- 글로벌 사업자, 국외 클라우드 이용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점검

사업자 자율 규제 도입

- 통신·쇼핑 게임 등 체크리스트 배포



- 관련 협회별 자체 행동강령 마련 및 컨설팅 지원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및 비식별화 지원

-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사전 동의 예외 사유 확대
- 동의 획득 방법 추가
 - 문자, 모바일 앱, SNS 등으로 다양화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 APEC CBPR 운영으로 국외이전 보호체계 강화
- EU 적정성 평가 추진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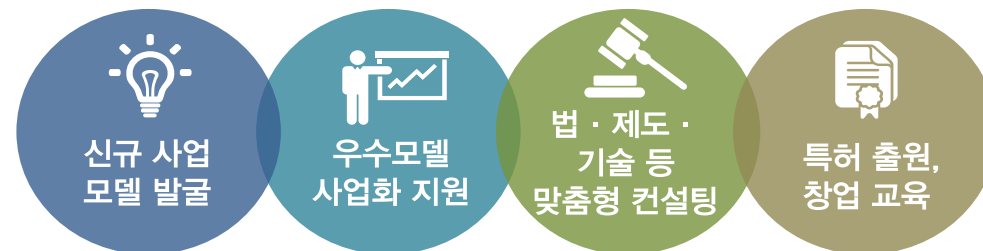


EU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용이



위치정보 산업 육성

-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해소
 - 사물위치정보사업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소상공인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간소화
- 창업 지원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핵심 추진 과제 4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 혁신 추진

대내 · 외 소통과 혁신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대국민 의견수렴 프로세스 구축

국민숙의제

- 영향력이 큰 주요 방송통신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공개토론, 공론화위원회 등)

국민의견 반영서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안건에 대해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제출

* 단계적 실시 : 상반기 시범실시 후 하반기 확대 시행

국민제안 · 신고

* 국민 아이디어 공모 내용 반영

- 국민 제안 · 신고 관련 작성법과 우수 사례를 홈페이지에 제공

국민 중심 방송통신정책 재설계

-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 주요 정책의 입안 · 집행 · 환류 전 단계에 국민 · 전문가 · 정책수요자 참여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개최

방통위 일하는 방식 개선

- 열린 근무혁신 10대 제안

방통위 근무혁신 10대 제안

- 국회 · 행사등 대기 · 의전 간소화
-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연가사용 활성화
-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 똑똑한 보고
- 똑똑한 회의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건전한 화식문화
- 명확한 업무지시
- 업무집중도 향상

- 내부 정책공유채널 운영(영상회의 활용)
- 가이드라인 일몰제 · 실명제 시행 * 국민 아이디어 공모 내용 반영

* 방통위 소관 가이드라인 수('18.1월) : 26 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앞장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